희망세상 (2006년 3월호 / 42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6년 3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민주노조운동이 비정규직 운동입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보호를하다보면오히려사용자들이비정규직채용을꺼리게될수있다.”(이상수노동부장관)

“노동계의 주장대로 사유제한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 오히려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수 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사유제한을받아들일수없다.”(우원식국회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미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 시 중소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서 사유제한의 폭을넓힐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 중소기업이받을 충격을 걱정해 기간제 사유제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어렵고 힘든 사람끼리 윗돌 뽑아서 아래 돌 채우자는 것’이다.”(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핵심 쟁점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사유제한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조준호민주노총위원장)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싸고 당정과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기간제 사유제한을 도입할 경우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어 실업난이가중될것이라며반대하고 있고, 이에대해민주노동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만큼 사유제한 도입과 중소기업 집중 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주장을펴고있다.

이런논의에대해노동계는기간제사유제한은결코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비정규직철폐현장투쟁단과 비정규직노동법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 등을 조직하여 천막농성 등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2월 말 집중집회를하겠다는선언을하고있는상황이다.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비정규직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40)을만났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고용계약을 맺는 노동자는 다비정규직입니다. 기간의정함이있으나직접적으로 고용되어있는계약직노동자, 기간의정함이용역회사와 원청과의 정함인 즉 실질사용자와 법률상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는 간접고용, 본인이 스스로 용역인 특수고용노동자인구조로이루어져있습니다.”

그는비정규직의개념을명쾌하게정리했다. 정부에서는 계약직 노동자를 상시고용 노동자라고 주장을 하며 비정규직 범주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상시고용을 할 거면 정규직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의 가장 나쁜 점은 고용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만든다는 점이라고 했다.

“기간제는 출산휴가나 산재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일정기간 빠질 경우에만써야 합니다. 그럴경우를 말고 왜 기간의 정함을 둬야 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당연히 정규직으로 써야 할 것을 기간의 정함을 두게 되면 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나저임금등을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사용사유를제한해야한다고얘기하는겁니다.

열린우리당에서얘기하는기간제안은딱2년만쓰고다 정규직화하면 될 거아니냐는건데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파견노동자들 처음에 만들 때 2년만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하여 그 삶을 파괴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논제에 대해 합의할 권리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사진제공 정용석)

쓰고 정규직화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다 2년 되기하루전날짤렸어요. 기간을제한하는것은기간제를 줄이는 효과는 0.1%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의고용불안의강도를높이는방향으로만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유제한을 해야 하고 사유제한은 합리적사유를전제로해야합니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기간이정해진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제 노동자의 대다수가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계약기간을 여러 번 반복 갱신해 일하며 언제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현실론’의 허구성

비정규직 법률안에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원칙에서한발물러나일정정도양보하고얻을수있는 건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유제한 에대해절대물러설 수 없다던 민주노동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더욱 불거지고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률인가가 아닌 사유제한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현실론이라고생각해요.

파견법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를 막을 수 없으니 범위를 축소해서 받아들이자고 해서 26개 업종으로 축소해 파견법이 생겼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년마다 계속 해고되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파견직 노동자들이 겪는 압박감이나 불안감, 고통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하여 그 삶을 파괴하거나 불안정하게 만드는 논제에 대해 합의할 권리는 어느 누구도갖고있지않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에 대해 분노했던 이유 중 하나는 수정안을 내면 뭔가 이 사유제한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런 비현실적인 판단이 현재 기간제인 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고, 힘을 합치고 기대해야 할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치를 저버리게 하는 내부의 효과를발휘하는결과를낳고있다는거죠.

저희가 철모른다는 얘기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지만, 적어도노동운동진영만은우리내부를가르거나 누구를희생시키지않고, 그래서깨지더라도나중에 우리가 함께 가보자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을보여주기위해서라도어떤경우에는현실성없는 것을선택해야할때도있다고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비정규직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정규직화라고 간주하지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투쟁은 당장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권리를 찾을 수있는 원청사용자성문제, 특수고용 노동자성 문제, 기간제 노동자의 문제 등 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이 일순위입니다.

두번째는생활권문제입니다. 생활권이라는 건 최저임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 노동자들의 4대 보험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 투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발적 조직, 서로의 위계를 인정하지 않는 수평적 연대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굉장히중요하고핵심적입니다.

비정규직은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대변하며,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정규직 노동운동인 것이 아니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변화시켜 왔고, 조직해 왔고, 투쟁해 온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변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과거의 관성이 남아있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변화시켜나갈거라고믿고있어요.

현재민주노조운동이곧비정규직운동입니다.”

통계청조사에의하면전체노동자의 55.4%가 비정규직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과‘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상황

은 자명하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신규 노동자의 비정규직으로의 채용 등 비정규직이 더욱 양산될 것이며,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기본권의 박탈, 노동자사이의경쟁과위계화가심화될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노동하고있는우리모두의문제이다.

글 이수원

사진 황석선